

강원도

동절기 축사 화재예방에 총력

강원도는 최근 축사와 전기시설 노후 및 동절기 한파로 인한 전열기구 사용증가 등으로 축사 화재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축사화재 특별 예방대책을 추진한다.

도내 축사화재는 매년 50여건이 발생하고 2012년도 피해 규모가 424백만원이 넘으며, 축종별로는 소 39%, 돼지 30%, 닭·오리 14%, 축산창고 등 기타에서 17%가 발생했고, 유형별로는 전기적 요인이 35%, 계절별로는 겨울과 봄철이 전체 발생에 75% 가량을 차지하고 있어 전기시설 안전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도에서는 2012년 추경에서 총사업비 1,500백만원을 확보하여 가축재해보험사업을 지원 추진하였고 2013년도에 총사업비 1,500백만원을 확보하고, 재해보험 가입 농가 부담액(50%) 중 30%를 지방비로 지원함으로써 농가 부담률을 20%로 경감하였다.

아울러 축사시설 전기 안전점검 사업비 100백만원을 확보하여 절연상태, 옥내배선, 누전여부 등 점검과 수리, 불량품 교체 등 현장 조치를 병행 추진해 나간다고 했다.

한편 도 축산진흥과장은 "축사화재는 축산농가에 막대한 재산피해를 줄 뿐 아니라 시설 재건축 등 축산업 재개에도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축산농가의 화재에 대한 안전의식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며, "축사화재 예방교육을 추진, 강원도 차원의 축사 사전 화재 예방 활동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충청남도

가축분뇨 정화에 1,120억 투자

충남도가 수질오염의 원인 가운데 하나인 가축 분뇨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내놨다.

도는 지난해 12월 17일 대전 선화동 도청에서 2021년까지 10년 동안 1,120억원을 들여 가축 분뇨 공공처리시설의 1일 정화 처리 용량을 지금보다 435m³, 자원화 용량은 1,020m³ 늘리는 것을 뼈대로 한 '충청남도 가축 분뇨 관리 기본계획'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열었다.

충남발전연구원이 맡은 연구용역 결과를 보면, 1단계로 2014년까지 544억원을 들여 정화처리 205m³, 자원화 용량 525m³를 늘리도록 했다. 또 2단계(2015~2017년) 190억원, 3단계(2018~2021년) 386억원을 같은 사업에 쓸 계획이다.

부서별 업무도 체계화하기로 했다. 축산 부서는 가축 사육의 효율적인 관리·규제와 분뇨 자원화 기술 개발 등을 맡고, 환경 부서는 무허가·미신고 축산농가 집중 관리와 공공처리 시설 활용과 유입 대상 확대, 가축 분뇨 관리 대책협의회 구성·운영 등을 전담하게 된다.

또 기존 축산농가는 유지하되 신규 사육을 제한하는 '가축 사육 제한지역 설정'을 추진하는 한편 도와 15개 시·군, 축산업협동조합과 함께 분뇨 관리 현황을 전산화한 뒤 통합 관리하는 안이 나왔다. 소규모 농가 지원, 친환경 사료·청소제 공급, 퇴비화 유통망 지원 등의 정책도 제안됐다.

경상남도

밀양시, 가축사육 제한지역 확대 실시

밀양시는 최근 시민들의 환경권 보전 욕구가 증대되고, 축산시설 허가·신고에 따른 주민의 환경민원이 증가하여 '밀양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 지난해 12월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시행일 이후 축사 신규 인·허가 및 증축 건에 대해서는 개정된 조례안을 적용한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가축사육 전부 제한 지역을 도시지역, 5가구 이상 주거 밀집지역 등으로 확대하고, 일부제한지역은 전부제한지역으로부터 직선거리로 돼지·개는 800m 이내, 닭·오리는 700m 이내, 소·젓소 등 기타 사육은 350m 이내로, 이 구역 안에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게 된다.

또한, 가축사육제한 지역 내 예외규정을 신설하여 소·젓소·말·개 5두 이하, 닭·오리 20수 이하의 반려동물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소규모 가축사육은 가능하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환경관리과 환경시설담당(053-359-5323)으로 문의하면 된다.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제 신청 접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이하 경남농관원)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친환경인증과 HACCP(안전식품인증) 농장 지정을 받은 축산농민을 대상으로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제 신청을 받는다.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제는 친환경농가의 소

득보전과 친환경 축산 확산을 위해 지난 2009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지난해에는 70억 원의 예산으로 축산 농가에 지원했고, 올해는 사업 예산을 100억 원(전액 국고금)으로 대폭 늘려 지원한다.

선정된 농민은 한우, 돼지, 닭(육계), 오리 등의 친환경축산물 출하량에 따라 농가별로 최고 2000만 원까지 지원을 받는다.

가축분뇨 관리, 환경보전, 자원 순환, 경관 조화 등을 기준으로 선정된 환경 친화 축산농장은 20%까지 추가 지원이 가능하고, 선정이 되면 3년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경상북도

가축재해보험료 75% 지원

경북지역 축산농가들이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할 경우 보험료의 75%가 지원된다.

경북도는 축산농가가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할 경우 지난해까지 국비 50%가 지원됐으나 올해부터 지방비 25%를 추가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축산농가는 보험료의 25%만 부담하면 된다. 지방비는 농가당 75만원 한도내에서 지원해준다.

지원 대상 가축은 소·돼지·닭·말·오리 등 16종이며, 도내에서 이들 가축을 사육하는 축산농가나 법인에 보험료를 지원해준다.

경북지역에서는 2011년의 경우 767개 농가가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했으며 그 해 화재·수해 등의 각종 재해와 질병(법정전염병 제외) 등으로 325건의 피해가 발생, 15억5000여만원

의 보험금이 피해 농가에 지급됐다. 현재 경북 지역 전체 축산 농가는 3만6000여 농가로, 경북도는 올해 1500여 농가가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경북도 정창진 축산경영과장은 “축산물 가격 하락과 사료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방비를 추가, 보험료 지원 폭을 확대했다”며 “가입 조건이 많이 나아진 만큼 안정적인 축산 경영을 위해 가축재해보험을 적극 활용해줄 것”을 당부했다.

전라북도

순창군, 가축재해보험 자기부담금 지원

순창군이 축산농가의 안정적인 경영 유지 등을 도우려고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의 자기부담금 일부를 지원한다.

군에 따르면 가축재해보험은 축산농가가 풍수해 등 자연재해와 화재, 법정전염병을 제외한 가축질병 등으로 가축피해를 입었을 때 이를 보전해 주는 보험이다. 정부에서 50%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관내에서 한우와 육우, 젖소, 돼지, 닭, 오리 등을 사육하는 축산업 등록 농가로 연중 추진한다.

하지만 각종 재해가 빈발하면서 보험의 필요성을 알지만 만만치 않은 자기부담금으로 축산농가들이 보험가입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군은 축산농가를 위해 1억3천6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고 자기부담금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현재까지 30여 농가가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했다.

한편 보험 신청은 순정축협을 통해 접수하고 있으며 가입금액은 가입자가 자율 결정하되 가입기간은 1년 단위로, 농가당 지원한도액은 400만원으로 국비 50%, 지방비 25%, 자기부담금 25%를 적용받는다.

이와 관련 한정환 군 축정담당은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지원으로 관내 축산농가의 안정적인 경영유지와 소득안정망이 확충돼 축산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남원시, 축산업 활성화 지원대책 마련

전북 남원시는 축산물 수입개방 확대와 사료 가격 인상 등 경영비 부담 증가로 어려움을 겪는 축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대책을 마련했다.

남원시는 올해 고품질·고부가 환경친화적 선진축산업 육성에 중점을 두고 축산업 활성화에 전력을 기울이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시는 노후축사 개보수 및 현대화를 비롯해 가축개량, 면역증강지원 품질고급화, 축산기자재 공급, 경영비 절감, 가축질병 안전차단 등을 역점적으로 추진한다.

이를 위해 한육우 육성에 13억원, 낙농 육성에 8억원, 양돈, 닭, 오리 등 중소 기타가축 육성에 8억원, 풀사료 재배면적 및 이용확대에 59억원 등을 투자한다.

또 축산업 등록제, 축산관련차량 등록제 등 선진화된 가축방역체계를 구축해 농가경쟁력을 강화한다.

이환주 남원시장은 “자유무역협정(FTA) 등 국내외 소비시장 급변·다양화에 따른 능동적 대처와 맞춤형 농업경영개선 등 농업 경영마인드 제고로 경쟁력을 강화시킬 방침이다”고 말했다. 